



# 부산신항 12월 시범운영, 마일리지카드제 도입

## 독과점 방지위해 터미널 운영사 선정방법 개편

부산신항의 개장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12월에는 실제 선박이 입출항하고 화물도 하역하는 시범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항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카드제가 도입되고 컨테이너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7일 오전 신항개장 추진사항에 대한 정례브리핑에서 “조기개장되는 북쪽 컨테이너 부두 3선석에 설치할 크레인 6기와 야드 트렉터 7기가 속속 반입되고, 항로표지 시설, 선박 계류지, 행정 지원동 건설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돼 8월말 현재 공정율이 91%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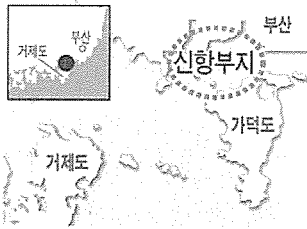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신항명칭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기 개장 대상 부두 3선석과 물류부지 2만5000평에 대한 행정구역도 원활한 신항 개장을 위해 해양부가 방침을 정해 관할 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부여와 관련해 강 차관은 “북항과의 연계 육성을 위해 북항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신설 항만임을 감안해 안정될 때까지 추





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현재 북항에서 TEU(20feet

컨테이너 한개)당 2만원씩 징수하던 컨테이너세를 내년부터 신항에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00만TEU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가칭 마일리지카드제(KBNPS: Korea Busan New Port Suhyup)를 광양항과 함께 도입해 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와 포워더의 신규물량을 점수화해 이들에게 물량 창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강 차관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 부산항만공사(BPA), 수협이이금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동 제도 시행으로 선사는 12억원, 화주와 포워더는 26억 등 총 38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인센티브와 운영사(PNC)의 마케팅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개장 1년차 물동량은 하역능력 대비(90만 TEU) 50%가 넘는 45만TEU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항만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터미널 운영사, 선사, 항만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9월8일 부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특히 초기 터미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은 하역능력 대비 개장 1년차는 화물처리량 30%이상, 3년차에서는 50%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하역능

력 기준 전국 컨테이너터미널의 20%, 동일 항만 내 3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권내 투기적 지분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완료(운영권 확보) 후 최소 3년간은 지분양도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양도할 경우 항만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권 취득 후에는 계약기간의 1/2을 최소 임대기간으로 설정해 위반시 계약위반금을 패널티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신항 명칭문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부산신항 행정구역문제가 결국 2007년까지 부산시가 일단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9월14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부산신항 명칭 문제를 국가사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려 부산신항 명칭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중 부산신항 1단계 3선석과 배후부지 2만 5000평이 내년초 조기 개장하게됨에 따라 논란을 막기 위해 관할지자체를 부산시로 임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되는 부산신항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가적인 대역사업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행정구역에 대한 명시적 법령 미비로 인해 양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으로 자칫 시작부터 비정상적인 개장이 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광역시 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 강무현 해양부 차관) 등을 통해 양 지자체의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나 항만명칭을 비롯해 부산신항 관할권을 놓고 발생한 양 지자체의 대립으로 인해 합리적인 대안도출이 어려워 부득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